

계속 뛰는 호가... 추가 규제 비웃는 서울 집값

정부 합동점검반 불시단속에도
지난주 서울 집값 0.12% 올라
비투기지역 등 전역 상승곡선

과열지역 매물 귀해 부르는게 값
하반기엔 1억 이상 더 오를 듯

“또 2000만원 올랐어요. 지금 안 들어
가면 나중에 후회해요.”

공휴일인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인근
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. 국
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를 위
해 잠실주공5단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합
동 단속을 벌인 지 이틀 뒤였다. 정부의
규제 강화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
지 않는 분위기다.

◆ 정부 단속에 문자·전화 영업

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
과열 조짐이 보이는 서울 곳곳 부동산 중
개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. 정부가
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
화해서다.

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일부 지
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지속



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. 사진은 마포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
역. /채신화 기자

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
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
하기로 했다.

한동안 서울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규
제에 안정세를 보였다. 그러다 지난달 초
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통합개발, 여의
도 마스터플랜 발인 직후부터 다시 오름
세로 전환했다.

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
트 값은 0.12% 올라 6주 연속 상승폭이
확대됐다.

개발 기대감에 휩싸인 여의도는 물론
용산과 강남4구(강남·서초·송파·강동구)
도 상승세로 돌아섰다. 비투기지역인 은

평·관악·중구·금천·성북·동작 등도 아파
트값이 올랐다.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이
상승 곡선을 타는 모양새다.

이에 국토부·서울시 합동점검단은 지
난 7일 용산구 신계동 ‘e편한세상’ 등 주
요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
며 다운계약 등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
위를 집중 조사했다. 13일에 강남 재건축
단지인 송파구 잠실 5단지 일대 공인중개
업소를 점검했다.

합동점검반은 앞으로도 서울 주요 과
열지역에 대해 단속을 상시 진행할 계획
이다. 이에 일부 중개업자들은 한동안 문
을 닫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매수

희망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.

성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“빌딩
이나 재건축 거래가 많은 용산 등에선 다
운 계약서를 작성이 빈번하니까 단속을
앞두고 숨길게 많을 것”이라며 “그런데 어
차피 그런 지역은 고객을 따로 관리하기
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도 전화나 문자메
시지로 영입이 가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◆ ‘하반기엔 1억 더 올라있을 것’

정부의 불시 점검으로 부동산 시장이
정신없는 와중에도 호가는 올랐다.

마포구 ‘마포자이’ 84.692㎡의 경우 중
저층이 10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.
지난주까지만 해도 10억3000만원대에 호
가된 물건이다.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
“매물이 거의 회수돼 나와 있는 매물이 귀
한 시점”이라며 “지금 추세로 보면 하반기
엔 1억~1억5000만원은 더 올라있을 것”
이라고 예상했다.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이
달 체결된 건만 봤을 때 마포구 아현동
‘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’는 59.9656㎡
가 8월 1~10일 10억2000만원(7층)에 거래
됐다.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
이 아파트는 현재 중소형 평수가 11억원
대부터 호가가 형성돼 있다.

그는 “이달 초만 해도 10억원대부터 매
물이 나왔는데 주변 집값이 오르면서 집
주인이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”며 “이
마저도 거래가 완료되고 현재는 매물이
한 건도 나와 있지 않다”고 말했다.

실제로 현재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
용산구 서빙고동, 한남동, 갈월동, 남영
동, 염리동 등에서 8월 거래가 한 건도 없
었다. 시범아파트 등이 있는 여의도동에
서도 거래가 제로다.

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운 연구위원
은 “이번 합동점검은 집값 안정화 효과보
다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시그
널”이라며 “불법이나 편법의 소지가 많
다 는걸 알리으로써 현재의 서울 아파트 가
격이 정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
다”고 말했다.

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
“현재 용산, 여의도 주변엔 매물도 없고
비수기인데 호가가 오르니 미리 염포를
놓기 위해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”이라
며 “그것보다 변호사, 감정평가사 등처럼
공인중개협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
관리, 감독 권한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인
것”이라고 제언했다.

/채신화 기자 csh9101@metroseoul.co.kr

“5년간 초과 세수 60조 예상 내년 적극적인 재정 나설 것”

김동연 부총리, 국가재정포럼 강연

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
“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
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
로 예상한다”고 밝혔다.

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상공회의
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
하며 “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
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
로 본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

이처럼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
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
강조했다.

그는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설
명하면서 “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.
7%, 5년간 증가율은 5.8%로 가져가려고
했다가 내년 치 목표를 2%포인트(p) 올
리자고 제안했다”며 “원래 2%p 올리는 데
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(α)를 하려고 하
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”이라
고 설명했다.

이어 “확대 재정에서 (재정지출 증가율
이)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보다 더 중요
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”이라며
“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



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
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
포럼 ‘포용적 성장,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’에서
기조연설을 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하면 확대 재정을 쓰지 않은 것만 못하
다”고 덧붙였다.

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털어냈다.

김 부총리는 “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
황”이라며 “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
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
로 줄였지만,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
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
있다”고 말했다. /세종=최신용 기자 grandtrust@

손해봐도 팔고 보자... ‘어른이보험’ 경쟁과열

(어른+아이)

장기적 손해를 악화 우려에도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확대·경쟁 보험사CEO 모럴해저드 지적도

올해 들어 어린이보험 시장 경쟁이 격
화되고 있다. 주요 손해보험사가 해당 상
품의 가입연령을 30세까지 확대·출시하
면서 일명 ‘어른이(어른+아이)보험’으로
불리고 있다.

일각에서는 어른보험보다 ‘더 싸게, 더
길게’ 보상받는 어린이보험을 놓고 장기
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품임에도 손
보사 최고경영자(CEO)가 ‘내 임기 때만
아니면 된다’는 식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
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
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, D
B손보, 메리츠화재, MG손보 등 손보사
들이 기존 17세까지 가능했던 가입 나이
를 만 30세까지의 성인도 가입할 수 있는
어린이보험을 일제히 개정 출시하면서

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처음 확대한
곳은 DB손보다. DB손보는 4월에 출시한
‘아이리브건강보험1804’의 가입 가능 나
이를 기존 20세에서 30세로 올리고, 질병
후유장해 3% 이상 담보를 신설했다. 같
은 달 메리츠화재도 ‘내맘같은어린이보
험’의 가입연령을 30세로 확대하고 질병
후유장해 특약을 확대했다.

두 손보사는 이 덕분에 좋은 실적을 거
뒀다. 4월 기준 DB손보의 어린이보험 판
매 건수는 2만2450건, 원수보험료는 16억
원을 기록했다. 메리츠화재도 5월 기준
판매 건수 1만8673건, 원수보험료 14억
2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.

어린이보험을 업계 최초로 내놓은 현
대해상도 지난 6월 ‘어른이보험’ 흐름에
가세했다. 이에 6월 기준 판매 건수 2만
8000건, 원수보험료 14억4000만원을 기
록하며 전체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 점

유율(30%대) 1위를 유지하고 있다.

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0세로 확대
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보험사 CEO의
심각한 모럴해저드(도덕적 해이)가 자리
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

어린이보험은 성인 대상 상품보다 보
험료는 짧게, 적게 내고 보장기간과 보장
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이
득이지만 보험사로서는 장기적으로 쥐야
할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
다. 그럼에도 CEO들이 당장의 매출을 위
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.

그러나 보험사들은 “밀지는 장사 안 한
다”는 입장이다. 사전에 손해율이 모두 계
산돼서 출시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.

한 보험사 관계자는 “멀리 봤을 때는 손
해율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”면
서도 “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는 상
품위원회를 열어 상품에 대한 검증 후에
출시한다”고 설명했다. /김희주 기자 hj9@

‘BMW 운행중지’에 렌터카·카셰어링 업체 비상

車 매각 또는 안전진단 중 서비스 재개 여부는 미정

국토교통부와 BMW 코리아가 리콜 대
상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에 적극적인 운
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신
뢰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
보인다. 렌터카 업체와 카셰어링 업체들
은 BMW 차량 서비스 재개 의사를 명확
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.

16일 국토부에 따르면 BMW 리콜 대
상 차량 차주들이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
을 하지 못하도록 대상차량 목록과 운행
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
체에 전달한다고 밝혔다.

현재 9700여대가 안전진단 예약 대기

중이다.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주가 안
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
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
벌금이 부과된다.

BMW 코리아 관계자는 “19~20일 정도
에 차주들이 우편으로 명령서를 받을 것
으로 보는데 그 전에 안전진단이 완료될
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그러나
안전진단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
국토부와 BMW 코리아의 노력과는 별개
로 렌터카,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아직 서
비스 재개에 대한 계획을 내보이지 않고
있다.

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BMW 520d, X
3의 셰어링 서비스를 8월부터 전면 중단
하기로 결정했다. 당초 쏘카는 리콜 차종

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
해 대차를 요청했다.

쏘카 관계자는 “BMW 해당 차종 56여
대에 대한 셰어링 서비스 재개는 하지 않
을 예정”이라며 “모두 매각할 계획”이라
고 밝혔다. 향후 신형 BMW 차량을 들여
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
고 전했다.

렌터카 업체 역시 서비스 재개 여부가
불투명하다. AJ렌터카 관계자는 “BMW
차량의 단기 렌트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
으며 장기 렌트의 경우 현재 안전진단 점
검을 안내하고 있는 입장이라 서비스 재
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”고 말
했다.

/정영우 기자 yw964@

>> 1면 ‘J노믹스 1년...’서 계속

정부, 패키지형 R&D도입 ‘8대 선도사업’ 지원 확대

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.
그간 외국 투자기업들이 꾸준히 불만을
제기했던 경직된 노동시장이나 규제환
경,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 입
장을 유지 중이다.

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“비판
여론에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고, 소득 주
도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

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한계가 있을
수밖에 없다”며 “혁신성장이라는 것이 구
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, 어떤 산업이 여
기에 속하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”고
지적했다.

혁신성장 정책 가운데서는 4차 산업혁
명에 대한 대응 정도만 가시화되고 있다.
정부는 핵심 선도사업의 연구개발과 제
도개선, 인력양성 등을 연계 추진하는 패
키지형 연구개발(R&D)를 도입하고, 8
대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활성
화 지원과 투자, 세제지원 확대를 도모하
기로 했다. /안상미 기자 smahn1@